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ffect of Trans-Pacific Partnership through East Asia Trade Network\*

한 능 호\*\* Neung-Ho Han

| 목 차 |

I. 서론	IV. TPP와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
II. TPP와 국제무역환경의 변화	V. 결론
III.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의 발전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동아시아 지역은 FTA 확대에 의해 국경을 초월한 경제일체화가 진척되고 있고, 각국의 규제제도 개혁으로 기업활동의 자유는 높아지고 있으며, 국경을 초월한 공정간 분업이 진전되고 있는 등 무역네트워크의 고도화가 촉진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2016년 2월 4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12개국이 협정문에 서명하였는데,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의 변화가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TPP가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에 미칠 영향에 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TPP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B5A07047327)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는 공급사슬의 글로벌화를 이끄는 규제 및 제도로써 공급사슬 구조를 변화시키고, 가치사슬에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한다. 이는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참여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TPP는 향후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실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로 인해 변화할 동아시아 무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 FTA, RCEP, 공급사슬

## I. 서론

동아시아 지역은 지속적으로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생산 및 소비적인 측면에서도 역내관계의 긴밀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활발하게 전개된 생산네트워크를 특징으로 하는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는 국경을 초월한 세분화된 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견고히 구축되어 있으며,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브렉시트(Brexit)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은 역내 FTA(Free Trade Agreement) 확대에 의해 무역장벽이 낮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경을 넘은 경제일체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각국의 규제 및 제도 개혁으로 기업활동의 자유는 커지고 역내 공정간 분업이 진전 되는 등 무역네트워크가 고도화되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초기에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의 소규모로 시작되었으나, 2008년 2월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해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가 참가를 표명하였고, 2013년 일본이 참가의사를 밝힘으로 인해 매우 큰 비중을 갖게 되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미국 등 12개국이 2015년 10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었고, 2016년 2월 4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모든 참가국이 협정문에 서명한 메가 FTA(mega FTA)이다. 이는 국제통상법의 발전과 아시아태평양 지역통합의 진전에 있어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TPP 가입을 적극 권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크게 작용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2013년 12월 TPP 참

여에 관심을 표명한 이후 참여를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세계시장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무역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현 상황에서, 국제무역환경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TPP가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하여 선행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TPP가 국제무역환경과 수많은 공급사슬(supply chain)로 연결된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에 미칠 영향을 문헌연구를 통해 고찰하였다. 또한 국제무역환경의 변화로 인해 향후 정부 및 기업에게 큰 기회와 위협이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TPP가 야기할 변화를 고찰하고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의 발전 방향에 관해 살펴보았다.

## II. TPP와 국제무역환경의 변화

### 1. TPP 추진경과

TPP는 2006년 5월 APEC에 가입한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이 참여한 P4(Pacific 4)라는 FTA를 모체로 한다. 미국이 TPP 교섭 참가를 표명하면서 호주, 페루, 베트남도 참가의사를 표명했고, 2010년 3월 8개국에 의해 협상이 시작, 10월에 말레이시아도 참여하였다. 이후 2011년 12월부터 캐나다, 멕시코, 2013년 7월부터는 일본도 협상에 참여, 현재 TPP 참가국은 12개국으로 확대되었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초광역 지역을 범주로 하여 거기에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최태욱, 2012).

TPP 협정에서 우선 거론된 분야는 시장접근(공업, 섬유 및 의류, 농업), 원산지규정, 무역원활화(세관절차 등), 위생 및 식물검역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이하 “SPS”),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TBT”), 무역규제(세이프가드 등),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서비스 무역(국경간 서비스 무역, 금융 서비스, 전기통신, 비즈니스 관계자의 일시 입국 등), 전자상거래, 투자, 환경, 노동, 제도적 사항, 분쟁해결, 협력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이슈사항 등이 있다(민경식, 2011).

TPP를 주도하는 미국의 추진 목적은 거대 수출시장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안정적으로 형성하고, 미국이 제외된 중국이 주도하는 수준 높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막는데 있

다(Bergsten and Scott, 2010). 이에 중국의 입장은 '견제하는 반대'로 표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G2(Group of 2)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경제적 패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시키는데 있어 TPP가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상황적 인식 때문이다. 반면 중국도 TPP에 가입하여 회원국간 유대감을 강화해 중국의 균형전략의 한 부분으로 전환시키자는 주장도 존재하는데,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와 상충되는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박창건·김용민, 2012). 특히 최근 중국이 추진하는 인프라의 확충과 국제무역의 활성화를 통해 중국의 서부지역-중앙아시아-러시아-유럽의 '육상 실크로드' 경제시대와 남부지역-동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유럽의 '해상 실크로드'의 구축을 통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 또한 TPP의 확대에 대처하기 위해 현대판 실크로드를 구축, 동아시아 경제질서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馬田, 2016). 중국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 소통(疏通), 인프라 연통(聯通), 무역 원활화(暢通), 자금 융통(融通), 민심 소통(相通) 등 '5대통'이라는 협력분야를 제시하였다(신중호, 2015).

일본은 2013년 7월부터 TPP 교섭에 참여, 최종 합의를 마쳤으며(石川, 2016), 한국은 2013년 11월 TPP 참가에 관심을 표명한 이후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奧田, 2016). 이는 TPP가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지향하는 대규모의 복수국간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s)으로 향후 FTA의 전형 및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이 TPP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글로벌 무역에서 소외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한국 정부는 TPP 협정 타결 이후 협정문 분석 등을 통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다(황기식·김현정, 2016).

TPP는 미국 주도로 주요 쟁점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2015년 10월 타결되었다. 이후 2016년 2월 협정문에 대한 12개 참여국의 서명이 이루어졌고, 현재 각 참여국의 국내 비준 절차만이 남아있다. 특히 참여국의 발효 지연을 막기 위해 TPP 협정문에서는 별도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협정문 제30장(Final Provisions) 5조(Entry into Force) 2항에서 서명 이후 2년 간 모든 회원국이 각국의 비준 절차를 완료하지 못해도 2013년 기준 역내 GDP(Gross Domestic Product)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최소 6개 이상의 회원국(원칙약국)의 비준절차가 완료되었을 경우, 비준이 완료된 회원국을 대상으로 위 2년이 만료된 60일 이후에는 TPP 협정이 발효하게 된다(이제희, 2016).

## 2. TPP로 인한 국제무역환경의 변화

<표 1> TPP 12개국의 관세철폐율(품목기준)

(단위: %)

국명	관세철폐율		
	전체	농산품	공산품
미국	100	98.8(55.5)	100.0(90.9)
일본	95	81.0(51.3)	100.0(95.3)
캐나다	99	94.1(86.2)	100.0(96.9)
호주	100	100.0(99.5)	99.8(91.8)
멕시코	99	96.4(74.1)	99.6(77.0)
말레이시아	100	99.6(96.7)	100.0(78.8)
싱가포르	100	100(100)	100.0(100)
칠레	100	99.5(96.3)	100.0(94.7)
페루	99	96.0(82.1)	100.0(80.2)
뉴질랜드	100	100.0(97.7)	100(93.9)
베트남	100	99.4(42.6)	100(70.2)
브루나이	100	100.0(98.6)	100(90.6)

주: 괄호안의 수치는 즉시 철폐율

자료: 内閣官房TPP政府対策本部(2015), 「TPPにおける関税交渉の結果」, p.6.

TPP의 관세철폐율은 <표 1>과 같이 결정되었는데, 대체적으로 한-미 FTA와 비슷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자유화 수준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8개국이 품목기준 100% 관세를 철폐했고, 캐나다, 멕시코, 페루 99%, 일본 95%로 나타났다. 특히 공산품의 경우에는 일본산 자동차를 우려한 호주가 중고차, 멕시코는 화물차를 예외로 인정받아 자유화 수준이 99.8%(호주), 99.6%(멕시코)에 머물렀고, 미국 일본 등 나머지 10개국은 공산품을 100% 개방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농산물 등에서 80여개 품목을 양허에서 제외해 자유화 수준이 낮아졌다.

TPP는 총 30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미 FTA와 비교할 때 더욱 자유도가 높다. 특히 기업인의 일시입국, 국영기업, 협력 및 역량 강화,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개발, 중소기업, 규제 조화 등 7개 챕터가 한미 FTA에 비해 추가되었고, 역내에 높은 수준의 단일 규범을 적용함으로써 규제 선진화, 비관세장벽 완화, 행정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이끌어, 역내시장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강화되고 교역과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sup>1)</sup>

1)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6년 2월 4일

<표 2> TPP와 한미 FTA 챕터 비교

챕터	TPP(30개)	한미 FTA
1	최초규정 및 정의(Initial Provisions and General Definitions)	
2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Goods)	상품
		농업
3	원산지(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4	섬유 및 의류(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5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Customs Administration and Trade Facilitation)	
6	무역구제(Trade Remedies)	
7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8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9	투자(Investment)	
10	국경간 서비스 무역(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11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s)	
12	기업인의 일시입국(Temporary Entry for Business Persons)	없음
13	통신(Telecommunications)	
14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15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	
16	경쟁(Competition Policy)	
17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s and Designated Monopolies)	없음
18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19	노동(Labour)	
20	환경(Environment)	
21	협력 및 역량 강화(Cooperation and Capacity Building)	없음
22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Competitiveness and Business Facilitation)	없음
23	개발(Development)	없음
24	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없음
25	규제 조화(Regulatory Coherence)	없음
26	투명성 및 반부패(Transparency and Anti-Corruption)	투명성
		의약품 및 의료기기
27	행정 및 제도규정(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Provisions)	1개 챕터
28	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	
29	예외(Exceptions and General Provisions)	
30	최종규정(Final Provisions)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5년 11월 5일, p.3.

TPP를 통해 높은 수준의 역내 공동규범이 수립되었는데, Hix(2005)의 상품규제와 절차규제를 구분한 선진국, 개도국의 이익 증감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상품규제에 대한 공동규범이 수립되지 않을시 회원국 간에 서로 상이한 규제로 인해 교역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공동규범이 수립될 경우에는 선진국, 개도국 모두에게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협력 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공동규범은 높은 수준으로 수립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절차규제는 상품규제에 비해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데, 절차규제에 있어서 공동규범의 수립이 선행되지 않거

나 낮은 수준에 그칠 경우 개도국의 이익이 선진국보다 높아진다. 이는 개도국은 선진국에 비해 생산과정에서 보다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선진국은 절차규제에 대한 공동규범을 수립하여 손실을 줄이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지역경제협력과정에서 절차규제 역시 높은 수준으로 수립하게 되는데, TPP는 이에 부합하고 있다. TPP 이후 예상되는 무역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 무역블록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며, 대중국 전략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이고, 무역에 있어서의 게임의 룰 또한 강화될 것이다. 또한 TPP의 강한 규범으로 인한 정부 역할의 축소, 기업의 책임 강화, 사업 형태와 영역의 변화에 따른 신흥 강자의 출현 등이 예상된다(김형주·이지홍, 2016). <표 3>과 같이 세계의 주요한 FTA와 비교해도 TPP가 규범과 자유화 수준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각종 FTA의 재화무역을 초과하는 포괄범위

포괄범위 \ FTA	TPP (2015)	P4 (2005)	일본-호주 (2014)	미국-싱가포르 (2004)	한-미 (2012)	NAFTA (1994)
관세·원활화	○	○	○	○	○	○
위생·식물방역조치	○	○	○	×	○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	○	○	○	○	○
무역구제조치	○	○	○	○	○	×
투자	○	×	○	○	○	○
서비스	○	○	○	○	○	○
금융서비스	○	×	○	○	○	○
사업가의 일시 입국	○	○	○	○	○	○
전기통신	○	×	○	○	○	○
전자상거래	○	×	○	○	○	×
정부조달	○	○	○	○	○	○
경쟁정책	○	○	○	○	○	○
지적재산권	○	○	○	○	○	○
노동	○	×	×	○	○	×
환경	○	×	×	○	○	×
능력배양	○	○	○	×	×	×
경쟁력·비즈니스 원활화	○	×	×	×	×	×
개발	○	×	×	×	×	×
중소기업	○	×	×	×	×	×
규제의 내외조화	○	×	×	×	×	×
투명성·반부패	○	○	○	○	○	○
분쟁해결	○	○	○	○	○	○

자료: Asian Development Bank(2015), Asian Economic Integration Report 2015: *How Can Special Economic Zones Catalyze Economic Development?*, p.45.

### Ⅲ.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의 발전

#### 1.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의 특성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면 原(1996)는 동아시아 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자유화에 의한 지역경제의 상호경쟁이 활발하게 전개됨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의 전통적 상업네트워크가 다시 활성화되었고, 외부에서 진입한 신규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동아시아 경제의 결합화가 진행되어 경제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역내 네트워크가 구축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글로벌 생산네트워크(global production network)는 공정별 분업화 내지는 생산분절화에 따라 복수의 생산거점이 상호 연결되는 생산네트워크를 말하는데,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방식처럼 전체 가치사슬(value chain) 중 비교적 낮은 가치의 생산 분야에 국한되었던 기존의 산업모델과는 달리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는 부품 및 생산에서 연구개발·사후서비스까지 핵심역량을 제외한 가치사슬 모두를 외부에 위임하는 산업모델이라 할 수 있다(복득규 외,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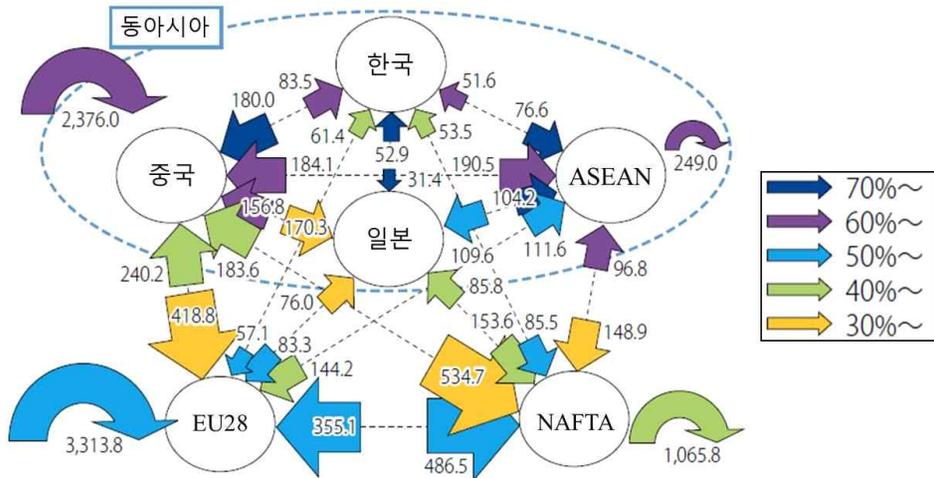
동아시아 지역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내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으로, 경제통합이 지속됨에 따라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의 특징은 역내에서 일본 및 한국과 ASEAN 등 개발도상국간의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이 증가하고 있으며, 동아시아국가들 간의 수직적 산업내 무역이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역외생산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Fukao et al., 2003), 기업내 무역(intra-firm)과 기업간 무역(inter-firm)이 복잡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Kimura and Obashi 2011). 동아시아의 무역네트워크는 지역 내 각국이 가진 노동, 자본, 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연결시켜, 국경을 초월한 분업을 형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업무의 국제거래를 진전시켰다(飯島, 2004).

동아시아 지역은 기초 인프라가 부족한 편이며, 법규, 제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높기 때문에 기업의 공급사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최근 들어 각국 간의 FTA의 활발한 추진으로 인해 무역네트워크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의 현황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은데, 가장 큰 특징으로 중간재 무역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과 ASEAN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수입하는 재화의 경우 한국, 일본, ASEAN 공히 중간재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부품을 비롯한 중간재를 한국, 일본 등 역내 선진국에서 중국, ASEAN 등의 생산기지로 수출하고, 이를 조립한 완제품을 다시 EU, NAFTA 등 대규모 역외시장으로 수출하는 구

조의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

<그림 1>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의 현황(2014년)

(단위: 10억 달러)



주: 화살표의 크기는 무역액, 색깔은 중간재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자료: 經濟産業省(2016), 「通商白書2016」, 日經印刷, p.312.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의 강화로 인해 역내에서의 효율적인 공급사슬 구축 여부가 역내 기업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이 관세철폐뿐만 아니라 공급사슬의 효율적인 구축을 지원하기 무역자유화, 원할화 등의 조치를 포함한 높은 수준의 통합을 목표로 무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石川, 2016).

## 2. FTAAP의 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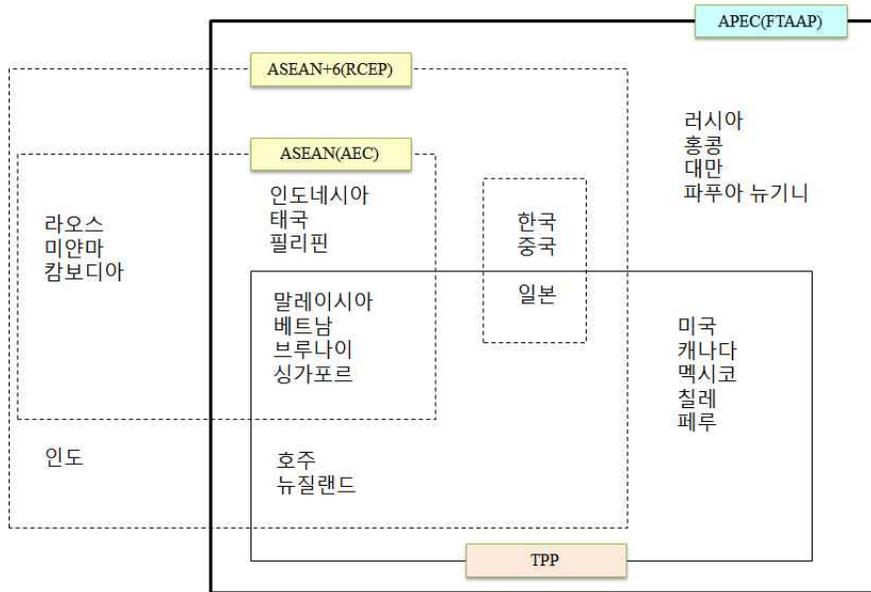
FTAAP(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구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PEC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 FTA를 구축하고 무역·투자의 자유화와 폭 넓은 분야의 경제협력을 목표로 하는데, 2004년 APEC 비즈니스 자문위원회(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가 산티아고 정상회의에서 이를 제안했다. 당초 실현가능성 차원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으나, 2006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FTAAP 구상을 내놓으면서, 관심이 고조되었다. FTAAP는 장기적인 목표로 자리매김하였고, 이를

촉진하는 방법과 수단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되었다.

동아시아 지역은 2010년 이후 AFTA의 진전, 5개의 ASEAN+1 FTA(한국, 중국, 일본, 호주·뉴질랜드, 인도)의 실현 등과 더불어 저개발 지역의 교통 인프라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캄보디아, 라오스 등과 같이 공업화가 늦어진 지역에서도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등 연결성이 강화되고 있는데, FTA 네트워크의 정비가 진전되면서 동아시아 지역, 또는 최종소비지도 추가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공정간 분업, 생산거점의 집약화 및 최적배치 등이 상응하여 발전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그림 2>와 같이 활발한 경제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APEC 참가국 및 지역 사이에서 FTAAP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TPP, RCEP, 한-중-일 FTA 등의 광역경제협력의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經濟産業省, 2016).

<그림 2> 아시아·태평양 경제연계의 중층관계



자료: 馬田啓一(2016), “ポストTPPとアジア太平洋の新秩序: 日本の役割”, 國際問題, 第652号, p.9.

APEC은 그동안 FTA 체결에 있어 불구속 원칙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APEC에서 FTAAP로의 체제 전환은 참여국의 정책에 있어서 구속의 도입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를 꺼려하는 중국을 비롯한 국가들은 FTAAP를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특히 만장일치체도를

도입하고 있는 APEC에서의 협의는 FTAAP의 실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었다. 또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염두에 둔 광역 FTA(ASEAN+3(한국, 중국, 일본), ASEAN+6(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구상은 모두 미국을 배제한 것인데, 중국과 ASEAN의 일부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경제질서의 재구축을 부정적으로 생각했기에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 있었다. 이에 미국은 APEC을 FTAAP 협상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포기하고 TPP의 확대를 통해 FTAAP의 실현을 도모한다는 전략으로 궤도를 수정, 2008년 9월 TPP 협상에 참여한다는 방침을 의회에 표명하였다. APEC은 2001년 패스파인더(pathfinder) 접근법을 채택하였는데, 이를 통해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지 않고 일부만 프로젝트를 선행적으로 실시하고 타국은 나중에 참여하는 방식을 인정하였다. 2010년 APEC정상회의에서는 ‘요코하마 비전’이 채택되었는데, 여기에서 FTAAP를 추진하기 위한 과정으로 TPP, ASEAN+3, ASEAN+6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이후 ASEAN+3, ASEAN+6은 RCEP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TPP와 RCEP의 양대 축에 의한 FTAAP의 실현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馬田, 2016).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 <표 4>와 같이 TPP12, TPP16, FTAAP는 효과적이며, 특히 FTAAP의 경우 참여한 모든 국가·지역에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TPP, RCEP, FTAAP의 경제효과

(단위: 10억 달러, %)

협정 국명	GDP 2025	TPP12	TPP16	RCEP	FTAAP
한국	2,117	76.6(0.38)	108.2(0.53)	-0.1(0.00)	295.2(1.46)
중국	17,249	-34.8(-0.20)	-82.4(-0.48)	249.7(1.45)	699.9(4.06)
일본	5,338	-2.8(-0.13)	50.2(2.37)	82.0(3.87)	131.8(6.23)
대만	840	-1.0(-0.12)	-6.4(-0.76)	-16.1(-1.92)	53.7(6.39)
ASEAN	2,149	62.2(1.67)	217.8(5.86)	77.5(2.08)	230.7(6.20)
인도	5,233	-2.7(-0.05)	-6.9(-0.13)	91.3(1.74)	266.2(4.32)
미국	20,273	104.6(1.96)	128.8(2.41)	95.8(1.79)	227.9(4.27)
호주	1,433	6.6(0.46)	9.8(0.68)	19.8(1.38)	30.1(2.10)
뉴질랜드	201	4.1(2.02)	4.7(2.36)	1.9(0.92)	6.4(3.16)

주: 1) 2007년 기준 2025년의 GDP 증가액, 괄호안의 수치는 증가율

2) TPP 12: TPP 회원국, TPP 16: 한국,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참가를 상정

자료: Petri, P. A. and Plummer, M. G.(2014), *ASEAN Centrality and the ASEAN-US Economic Relationship*, East-West Center, pp.40-41.

## IV. TPP와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

### 1. 공급사슬의 변화를 야기하는 TPP 규정

<표 5> 공급사슬의 글로벌화를 이끄는 TPP 규정

공급사슬 글로벌화 촉진정책	관련 TPP 규정	TPP 규정의 공헌도	
서비스 연결 비용 삭감에 관한 정책	관세철폐	물품 시장접근(2, 4)	강함
	무역원활화	원산지규칙(3), 무역원활화(5), 투명성·부패방지(26)	강함 규정 강도에 따라 점진적
	비관세장벽 철폐	SPS(7), TBT(8), 국유기업(17), 비즈니스 촉진(22)	규정이 적용되는 영역은 강함. 점진적
	물류인프라 정비	정부조달(15), 통신(13)	시장접근의 진전에 의존
	사업상 이동 자유·원활화	기업인의 일시입국(12)	강함
	법제·경제제도의 조화	전자상거래(14), 투자(9), 노동(19), 환경(20), 지적재산권(18), 국영기업(17)	규정이 적용되는 영역은 강함
각 공정의 생산비 삭감에 관한 정책	법인세 등 세제개혁	비즈니스 촉진(22)	한정적
	인적자원개발	서비스 시장접근(교육, 직업훈련 등)(10), 협력 및 역량 강화(21)	한정적 지원의 양과 질에 따름
	금융 등 생산지원 서비스 강화	금융서비스(11), 전자상거래(14)	시장접근의 진전에 의존 강함
	투자의 자유화·원활화	투자(9), 비즈니스 촉진(22), 규제 조화(25)	시장접근의 진전에 의존 점진적
	정부조달 시장접근	정부조달(15), 전기통신(13)	시장접근의 진전에 의존
	지적재산권 보호	지적재산권(18)	강함
	법제·경제제도의 조화	전자상거래(14), 투자(9), 노동(19), 환경(20), 지적재산권(18), 국영기업(17)	규정이 적용되는 영역은 강함
	인프라 서비스 공급	서비스 시장접근 (금융서비스·통신 포함) (10,11,12)	시장접근의 진전에 의존
	하청산업의 강화	투자(9), 비즈니스 촉진(22)	시장접근의 진전에 의존 토착산업 강화에는 한정적
	산업집적의 형성	투자(9), 비즈니스 촉진(22)	시장접근의 진전에 의존 토착산업 강화에는 한정적

주: 괄호안의 숫자는 TPP 협정문의 해당 챗터를 나타냄

자료: 中川淳司(2016), 「TPPと21世紀の貿易·投資ルール」, 「ポストTPPにおけるアジア太平洋の經濟秩序の新展開」, 日本國際問題研究所, p.13.

TPP 협정은 WTO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통상질서를 재편하는 대안으로 구상되었고, 향후 글로벌 통상규범으로

자리잡을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특히 TPP는 기존의 FTA가 다루었던 상품, 서비스, 투자, 기술장벽 등의 분야 이외에도 국영기업, 협력 및 역량 강화, 중소기업, 규제 조화 등 차별화된 분야를 다루고 있다.

TPP에서 채택된 규칙 가운데 공급사슬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조항을 살펴보면 첫째, 원산지(3챕터),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5챕터)로 공급사슬의 글로벌화에 있어 전반적인 무역비용, 특히 중간재의 무역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TPP의 원산지 규정은 TPP 당사국 역내에서 생산·수행된 재료와 공정을 모두 누적해 원산지를 판정하는 완전누적기준이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로 인해 여러 TPP 당사국에서 제조되는 물품에 일괄적으로 TPP 특혜세율이 적용되어, TPP 당사국 역내에서의 공급사슬을 구축하는데 강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TPP는 투명성 및 반부패(26챕터)에서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뇌물수수 및 부패 등을 근절하고, 통관절차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향상시키는 규정 또한 마련하고 있다.

둘째,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7챕터)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8챕터)에 관해서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협정 및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 SPS 조치와 기준인증제도의 투명성 제고로 이어지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특정물품(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정보통신기술제품, 유기농산물 등) 부속서가 설치되었고, 국제기준에 맞는 승인·위험 평가절차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향상된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또한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정부 간 협의절차가 도입되었다.

셋째, TPP에서 새롭게 독립된 챕터를 마련한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22챕터), 중소기업(24챕터), 규제 조화(25챕터)는 공급사슬의 글로벌화와 직결되는 분야 횡단적 사항(cross-cutting issues)으로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사슬을 전개하는 TPP 체결국의 기업 및 사업환경의 투명성 제고를 꾀하고 있다. 위 챕터의 규정은 모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노력의무 내지 정책목표에 그치고 있지만 각각에 대해 TPP 산하 별도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동료평가(peer review)를 통해 체결국의 노력의무, 정책목표의 단계적 실현을 도모할 것이다.

넷째, 전자상거래(13챕터)에서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협상 참가국이 기존 FTA에서 채용했던 선진적인 규칙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은 디지털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금지,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온라인 소비자보호, 전자상거래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의 보증 등으로, 이를 통해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이 높은 전자상거래 규범을 수용하게 되었다.

다섯째, 지적재산권(18챕터)에서는 WTO의 TRIPS(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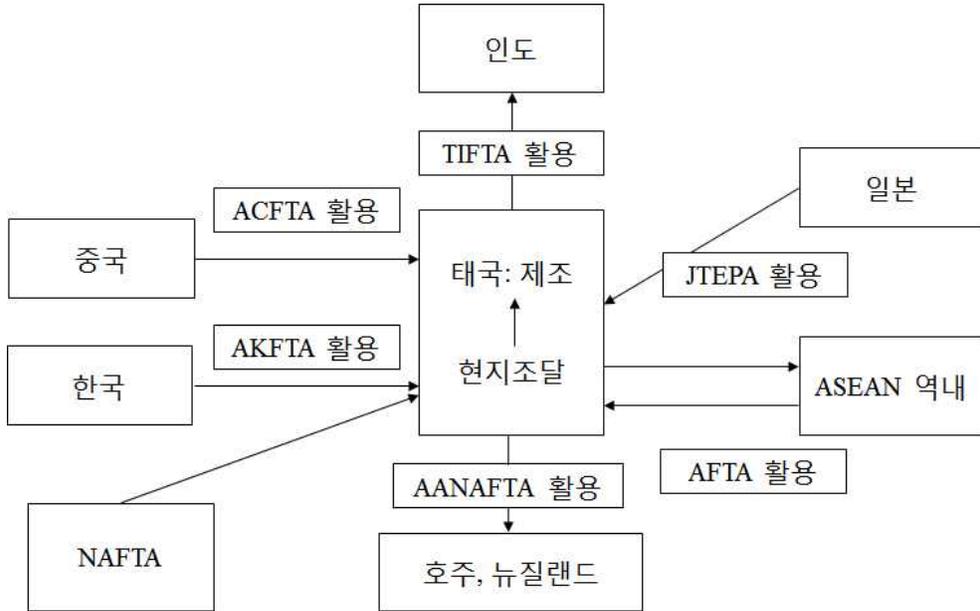
협정을 상회하는 광범위하고 높은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담고 있는데, 공급사슬의 세계화는 지적재산권과 경영노하우 등의 국경을 초월한 제공이 거래활동의 중요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사슬의 글로벌화를 이끄는 규제·제도 환경의 정비라는 관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TPP에서는 당사자의 권리행사(enforcement) 측면에서도 TRIPS 협정을 상회하는 규정을 다수 포함시키고 있다.

여섯째, 국영기업(17챗터) 조항으로 TPP는 국영기업에 대한 재정적, 규제상의 우대에 대해 WTO 협정과 기존의 FTA를 웃도는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글로벌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사기업은 진출 대상 국가의 국영기업이 재정적, 규제상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 진출 대상국의 시장 또는 제3국 시장에서 불리한 경쟁 환경에 놓이게 된다. TPP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국영기업이 상업적 고려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판매할 때 국내의 기업을 차별 없이 대우하고 통상적인 사기업의 영업 관행과 일치하도록 하는 상업적 고려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영기업에 대한 비상업적 원조를 통해 다른 당사국의 이익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고 있고, 다른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국영기업에 대한 국가의 소유 및 지배에 관한 정보, 국영기업에 대한 비상업적 지원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한다. 이는 외국의 사기업과 국영기업의 경쟁조건의 중립성(competitive neutrality)의 확보를 위한 규정인데, 이러한 규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체결국마다 상기의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국영기업을 열거하는 부속서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中川, 2016).

이와 같은 규범의 변화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의 기존 무역네트워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자유화 기조로 인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동아시아 시장 및 무역에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생산의 세계화가 이미 보편화된 현 상황에서 TPP로 인한 국제경쟁환경의 변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가치사슬의 변화로 직결될 것이다. 예컨대 무역장벽의 해소에 따라 저렴한 인건비 등으로 비용우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첨단산업, 자동차 및 제약 등과 같은 제조업 생산시절의 이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 정보통신 인프라 확장에 따라 전자상거래 시장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등을 같은 느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옴니채널(omni-channel) 전략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DHL, 2016).

## 2. TPP로 인한 공급사슬의 변화방향

<그림 3> FTA를 활용한 현재의 공급사슬(태국 TV생산 사례)



자료: 石川幸一(2016), 「日本企業のサプライチェーンとFTA」, 「ポスト TPPにおけるアジア太平洋の経済秩序の新展開」, 日本国際問題研究所, p.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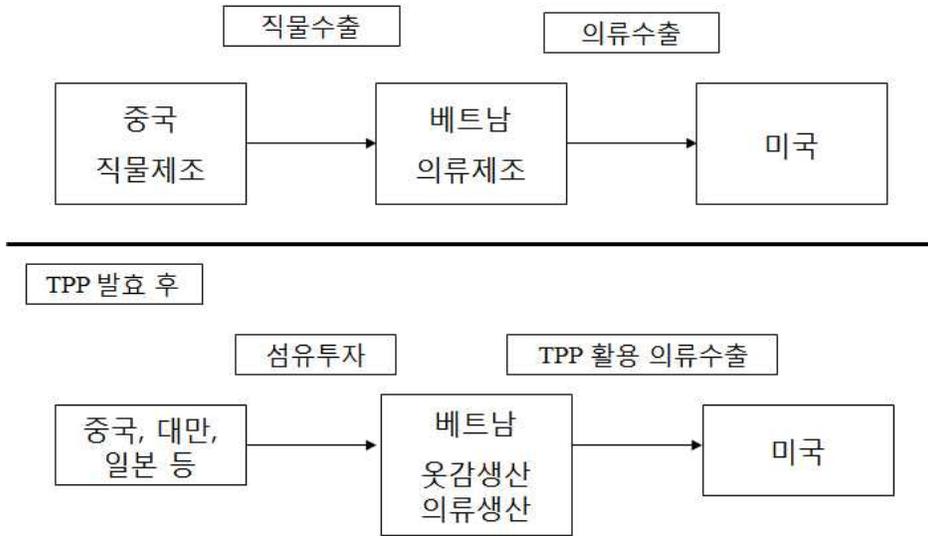
FTA를 활용한 동아시아의 공급사슬 사례를 살펴보면 <그림 3>과 같이 한국은 AKFTA (ASEAN-Korea Free Trade Agreement), 중국은 ACFTA(ASEAN-China Free Trade Agreement), 일본은 JTEPA(Japan-Thailand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ASEAN 역내 국가들은 AFTA(ASEAN Free Trade Agreement)를 활용하고, 호주 및 뉴질랜드는 AANAFTA(ASEAN-Australia-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를 활용하는 등 각국 간에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기반으로 태국의 생산기지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은 ASEAN을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가 중첩하여 구축되어 있지만 각 협정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FTA의 활용을 위해서는 기업의 업무 및 비용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역내에서 FTA 네트워크가 실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예컨대 일본에서 부품을 ASEAN에 수출 후, 이를 ASEAN에서 인도로 재수출하는 경우 원산지 규정(부가가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ASEAN-인도 FTA를 활용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아 각국이 참여하는 광역 FTA를 만들어 누적원산지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여기에서 메가 FTA인 TPP의 효용이 있는 것이다. TPP의 효과는 이미 동아시아 공급사슬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각 FTA 간의 규정 난립으로 인해 수출입 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인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TPP의 가치가 있다. 이는 통일된 단일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 다수의 참가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에 체결되었던 FTA에서는 투자개방 수준이 낮은 편이었던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서 TPP를 통해 높은 수준의 투자규범을 수용하게 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TPP 참여국가 가운데 수출에 있어 해외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국가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가운데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은 저렴한 노동비용을 바탕으로 글로벌 생산구조 내 신생산기지로 각광받고 있는 상황이다(이제희, 2016). 향후 이곳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TPP 체결국 소유 다국적기업에 비해 불리한 차별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TPP로 인한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 내 공급사슬의 변화를 베트남 의류제조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베트남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풍부한 노동력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데, 최근 대(對)북미 의류수출의 생산기지로 활용되고 있어, 의류 및 신발의 최대 생산국으로 부각되고 있다. 베트남은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관심 받고 있지만 인적자산 측면의 가격우위(cost advantage)에만 의존해 한국, 중국 등에서 원사 및 직물 등의 주요 중간재를 수입하여 의류를 생산하는 산업구조를 이루고 있다(홍석균, 2014). 베트남은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주력시장이자 생산기지로 완전히 자리매김했는데,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동아시아 각국의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해 투자와 무역이 선순환구조를 이루는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특히 TPP의 누적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역내 분업화 및 공급사슬의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는데, 베트남에서 섬유 등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는 것 또한 이를 대변하고 있다. TPP는 의류의 원산지 규정으로 “실의 제조, 직물제조, 재단봉제의 3공정을 TPP 참가국으로 하여야만 한다.”는 원사기준 원산지 판정방식인 양 포워드 규정(yarn forward rule)을 채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산 실로 제조한 원단으로 의류를 생산하면 TPP의 특혜세율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급사슬이 변화하게 된 것이다(石川, 2016).

<그림 4> TPP로 인한 공급사슬의 변화(베트남 의류 사례)



자료: 石川幸一(2016), 上掲論文, p.115.

TPP 협상이 시작된 후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베트남 등 각국의 기업 등에 의한 섬유생산 관련 투자가 이루어져, 중국에서 생산하던 직물을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구조로 <그림 4>와 같이 공급사슬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가공공정기준(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을 채용한 자동차산업 등에서도 공급사슬의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조달 및 투자의 움직임이 주목된다(石川, 2016). 특히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에 참여한 많은 기업들은 무역자유화로 인해 역내 공급사슬 연결성이 강화될 것을 상정하여 유수의 물류전문기업 등과 더불어 운송수단의 최적화, 각종 운송수단을 결합한 여러 종류의 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ation)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활용하여 전체 공급사슬의 효율성 및 배송품질 제고를 꾀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중이다(DHL, 2016).

이상의 논의와 같이 TPP는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 내 가치사슬을 크게 변화시키고, 공급사슬의 구조를 바꾸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동아시아 지역은 TPP, RCEP, FTAAP 등의 동아시아 역내, 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통해 새로운 무역질서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정부 및 기업의 입장에서선 시의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 V. 결 론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대두가 우려되고 있는 유럽 등 다른 지역과는 달리 심화된 생산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동아시아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서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역내 무역네트워크를 통해 발전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수국간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을 통한 국제경제블록의 구축이 각광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메가 FTA인 TPP는 아시아태평양 경제질서를 새로이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TPP는 타결과 동시에 세계 최대의 경제권을 형성하였고, 기존의 FTA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의 단일 규범을 적용하여 스파게티 불 효과를 완화시키고 규제 선진화, 비관세장벽 완화, 행정비용 감소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역내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교역과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TPP는 기존의 FTA가 다루었던 상품, 서비스, 투자, 기술장벽 등의 분야 이외에 국영기업, 협력 및 역량 강화, 중소기업, 규제 조화 등 차별화된 분야를 다루고 있고, 이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의 가치사슬과 공급사슬구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TPP가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TPP는 공급사슬의 글로벌화를 이끄는 규제 및 제도로서 TPP 가입국을 중심으로 공급사슬 구조를 변화시키고, 가치사슬에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한다. TPP는 무역과 투자의 국경 없는 자유화 및 원활화를 이끌고, 국내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제도 구축의 틀을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TPP 참여를 희망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여러 측면에서의 파급효과를 살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기업에서도 TPP가 기존의 경쟁 환경의 변화를 이끌고, 새로운 기회 또는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유념하여 경영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 주도의 RCEP의 추진과정에 주목하는 등 역내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고, 향후 FTAAP의 진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또한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TPP의 타결이 늦어져, 참여국의 비준절차가 진행 중이라 협정의 발효에 따른 실증연구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향후 TPP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후속 실증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형주·이지홍(2016), “TPP 이후 주목해야 할 사업환경 변화”, 「LG Business Insight」, pp.2-17.
- 민경식(201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교섭추진과 논점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7권, 제4호, pp.255-274.
- 박창건·김용민(2012), “일본의 TPP참가 논의에 대한 정치경제적 함의: 어쩔 수 없는 찬성”, 「신아시아」, 제19권, 제2호, pp.264-287.
- 복득규·임영모·박성배·정호성(2008), ‘글로벌 네트워크형 산업모델의 부상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 신종호(2015),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한반도에 대한 함의”,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5-20.
- 이제희(2016),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원산지 판단 기준”, 「성균관법학」, 제28권, 제1호, pp.283-310.
- 최태욱(2012),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일본 정책의 변화”, 「동아연구」, 제62권, pp.83-119.
- 홍석균(2014), “베트남 섬유, 의류산업 동향과 전망”, 「인도네시아 투자뉴스」, 제336호, pp.10-14.
- 황기식·김현정(2016),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에 따른 아태지역 FTA 규범의 수렴”,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4집, 제1호, pp.7-28.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5년 11월 15일.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6년 2월 4일.
- 飯島正樹(2004), “東アジアにおける日本企業のグローバル・サプライチェーン”, 「経営管理紀要」, 愛知学院大学, 第11号, pp.1-9.
- 石川幸一(2016), “日本企業のサプライチェーンとFTA”, 「ポストTPPにおけるアジア太平洋の経済秩序の新展開」, 日本国際問題研究所, pp.101-124.
- 馬田啓一(2016), “ポストTPPとアジア太平洋の新秩序:日本の役割”, 「国際問題」, 第652号, pp.5-15.
- 奥田聡(2016), “韓国のTPP参加表明:その背景と見通し”, 「国際問題」, 第652号, pp.40-50.
- 經濟産業省(2016), 「通商白書2016」, 日経印刷.
- 内閣官房TPP政府対策本部(2015), 「T P Pにおける関税交渉の結果」.

- 中川淳司(2016), “TPPと21世紀の貿易・投資ルール”, 「ポストTPPにおけるアジア太平洋の経済秩序の新展開」, 日本国際問題研究所, pp.7-30.
- 原洋之介(1996), 「アジア・ダイナミズム:資本主義のネットワークと発展の地域性」, NTT出版.
- Asian Development Bank(2015), Asian Economic Integration Report 2015: *How Can Special Economic Zones Catalyze Economic Development?*
- Bergsten, F. and Scott, J.(2010), “Submission to the USTR in Support of a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DHL(2016), “Demystifying Asia Pacific Trade Trends”, *DHL Trend Research*.
- Fukao, K. and H. Ishido, K. Ito(2003), “Vertical Intra-Industry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East Asia,” *Journal of the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es*, Vol.17, No.4, pp.468-506.
- Hix, S.(2005), *The Political System of the European Union, 2nd Ed.*, Palgrave Macmillan.
- Kimura, F. and Obashi, A(2011), “Production Networks in East Asia: What We Know So Far,” *ADB Working Paper Series*,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 Petri, P. A. and Plummer, M. G.(2014), *ASEAN Centrality and the ASEAN-US Economic Relationship*, East-West Center.

## A Study on Effect of Trans–Pacific Partnership through East Asia Trade Network

Neung–Ho Han

---

### • Abstract •

In the East Asian region, the advancement of trade networks is being facilitated, which turns out that economic integration across borders is being advanced due to FTA expansion, freedom of business activity growing through the reform of regulatory system in each country, and the processing of division of labor between processes across borders.

Trans–Pacific Partnership(TPP), which is a U.S. led multilateral FTA, was signed on February 4 2016 in Auckland, New Zealand by 12 countries, by which changes in the East Asia Trade Network are also expected. For this reason,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that TPP would have on East Asia Trade Network.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it was determined that TPP, as the regulation and system which will lead globalization of the supply chain, will change Supply Chain structure and result in a positive effect on Value Chain. This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ast Asian trade network, and connect to enhanced competitiveness of participating enterprises.

In addition, TPP seems to be the basis for realization of FTAAP(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in the future, Therefore, Korea who has high Degree of Dependence upon Foreign Trade will have to pay make political effort to effectively deal with this changing trading environment in East Asia.

---

<Key Words> Trans–Pacific Partnership, East Asia Trade Network, FTA, RCEP, Supply Chain